

정책이슈 리뷰

Policy Issue Review

해외동향 AI 위성 산불감지시스템(NGFS)과 산불데이터포털 - 네브래스카 최대 산불 대응 사례

4극3특 지역 자율 R&D 출범, 권역별 과학기술 성장모델 추진 p.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연자본공시 실무지원 강화와 충남의 대응과제 p.1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p.15
중소벤처기업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첫 국책사업 '양자 클러스터' 선정 p.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하수 바이러스 검사 6배 단축, 포집 필터 특허등록 p.19
경기도

경남도, 지역주도 인재양성 '전국 우수모델' ...초광역 사업 선정 p.25
경상남도

미국

AI 위성 산불감지시스템(NGFS)과 산불데이터포털 - 네브래스카 최대 산불 대응 사례

출처: NOAA NESDIS(2026.4.9.), "NOAA's Wildfire Detection System a "Game Changer" for Nebraska's Record-Breaking Morrill Fire" (<https://www.nesdis.noaa.gov/news/noaas-wildfire-detection-system-game-changer-nebraskas-record-breaking-morrill-fire>)

참고문헌: <https://www.noaa.gov/news-release/noaa-unveils-powerful-convergence-of-ai-and-science-with-revolutionary-next-generation-fire-system>

<https://www.nesdis.noaa.gov/news/noaa-launches-wildfire-data-portal-expanding-public-access-satellite-fire-information>

정지궤도 위성 + AI 알고리즘으로 발화 후 수 분 내 산불을 자동 감지하는 차세대 산불감지시스템(NGFS)

- NGFS는 NOAA의 정지궤도 기상위성(GOES-16/19) 관측자료에 AI 알고리즘을 결합해 구름 연기 속에서도 열 이상 지점을 자동 식별하고, 신규 발화와 화세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실험적 온라인 시스템임. 위성이 화재 에너지를 감지한 시점부터 최단 1분 내 경보가 가능하며 0.25에이커(약 1,000m²) 규모의 소규모 화재도 탐지한 바 있음
- NOAA 산불기상 테스트베드 평가와 2025년 3월 오클라호마 산불 대응을 거쳐 현장 채택이 확산되었고, 2026년 1월에는 NGFS 산출물을 공개하는 산불데이터포털(Wildland Fire Data Portal)이 개설됨. NOAA는 2026년 중 정식 운영 전환을 예정하고 있음

네브래스카 역대 최대 모릴(Morrill) 산불 대응에서의 NGFS 활용

- 2026년 3월 12일 발생한 모릴 산불은 저습도·강풍(적색경보 발령) 속에 당일 밤 9시까지 65마일(약 105km) 이상 번져 네브래스카 역사상 최대 산불이 되었고, 3월 24일 완전 진화까지 642,029 에이커(약 2,600km²)를 태움
- 실시간 산불정보 비영리기관 Watch Duty는 오후 1시 40분 NGFS 첫 감지를 받은 뒤 10분 내 후속 감지로 풍향에 따른 급속 확산을 확인하고, 첫 감지 13분 만에 사고를 게시하고 카운티에 경보하였음
- 미 산림청 등 화재분석관은 항공촬영·GPS 측량이 즉시 어려운 평원의 바람 주도형 산불에서 NGFS 열 감지로 화재 범위를 추정했으며, 저녁 풍향 변화로 남측 화선이 인구밀집지로 향하자 이를 실시간으로 관계기관에 전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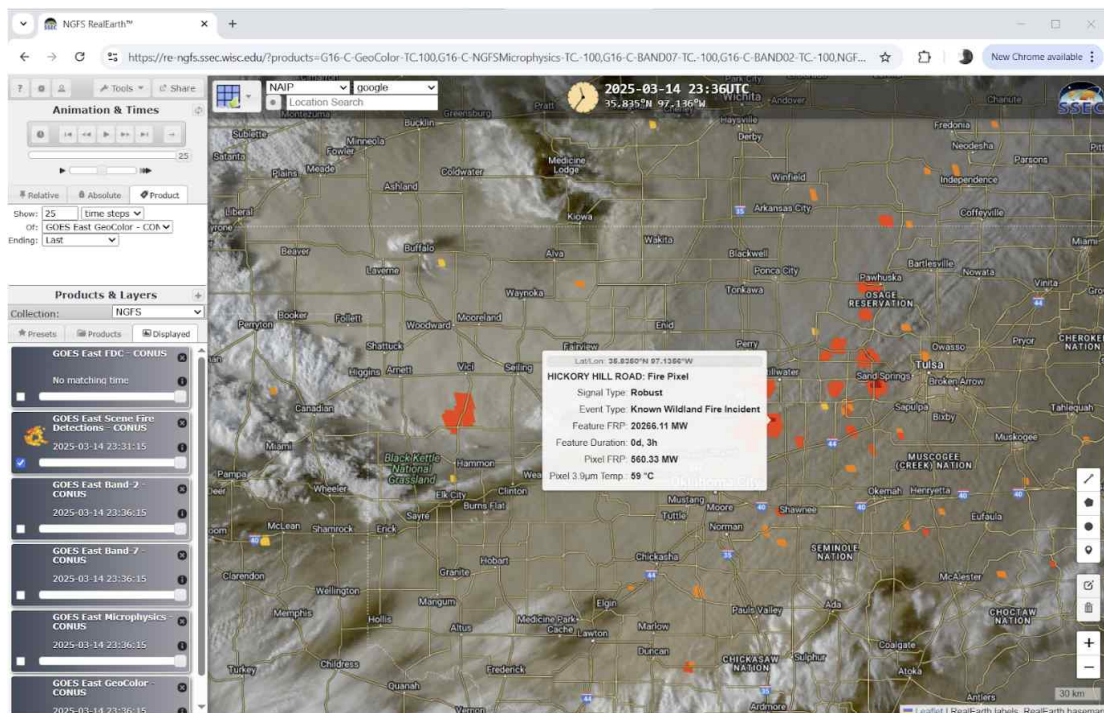


모릴 산불 피해 항공사진(2026.3.14.)

출처: <https://www.nesdis.noaa.gov/s3/2026-04/Aftermath-of-the-Morrill-fire.png>

위성 감지 → AI 판독 → 데이터포털 공개로 이어지는 NGFS 운영 체계

- GOES 정지궤도 위성 2기의 첨단기준영상기(ABI)가 생성하는 방대한 자료를 NGFS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분석해 구름과 연기 속에서도 열 이상 지점을 자동 식별하고, 신규 열원을 지표 영상 위에 지리참조해 온라인 대시보드로 즉시 경보를 내리며, 발화 후 5~30분 내 감지가 가능함
- 감지 정보는 기상예보관·화재 배치담당·현장 대응기관에 동시에 제공되며, NOAA 사고기상관(IMET)이 대형 산불 현장에서 상시 활용함. 캘리포니아 재난관리청(Cal OES)은 NGFS 감지를 주(州) 초동대응 뷰어에 연계해 상황인식에 사용하고 있음
- 2026년 1월 개설된 산불데이터포털은 NGFS 감지자료와 산불용도로 최적화된 GOES 영상(지오로케이션 정밀도 향상, 고해상도 지도 결합, 지역 단위 확대)을 공개하며, 시간대를 앞뒤로 이동하며 확산 속도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함
- 2025년 3월 오클라호마 산불 당시 주 당국에 따르면 GOES 위성이 19건의 화재를 최초 감지했고, 확산 모델링 예비분석 결과 신속한 대응으로 8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구조물·재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추정되며, NOAA는 이를 시스템 개발비의 250배에 해당하는 효과로 설명하고 있음



2025년 3월 오클라호마 산불 발생 시 NGFS를 활용한 화재 감지

출처: NOAA NESDIS/CIMSS

(<https://www.noaa.gov/news-release/noaa-unveils-powerful-convergence-of-ai-and-science-with-revolutionary-next-generation-fire-system>)

충남도 활용가능성 및 개선사항 - 기존 위성·감시 자산의 AI 판독과 정보 공개

- NGFS는 새 위성을 띄운 것이 아니라 기존 정지궤도 기상위성 자료에 AI 판독 알고리즘과 공개 데이터포털을 더해 초동 감지 시간을 단축한 모델임. 우리나라도 정지궤도 기상위성(천리안 2A호)과 산림청 산불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위성 열감지의 AI 자동판독과 지자체 상황실·민간 공개라는 접근을 검토할 수 있음
- 충남 차원에서는 산불감시 CCTV·드론 등 도내 감지정보를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시군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표출하고, 미국의 사례처럼 최초 감지부터 주민 경보까지의 소요시간을 관리지표로 삼는 방식이 적용 가능함.
- 다만 NGFS는 아직 실험 단계로 NOAA 스스로 정식 운영 전환을 2026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인간 의사결정자를 보조하는 도구(force-multiplier)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 확인과 병행하는 운영 원칙이 필요함

송민선 Valdosta State University

- ✓ 국가차원에서는 기상청 천리안 위성자료와 산림청 산불감시 정보를 AI로 자동 판독해 지자체·소방·민간에 공개하는 국가 산불데이터포털 구축을 산림청·기상청·행안부 협업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충청남도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위성·산불감시 CCTV·드론 감지정보를 통합 표출하고, 감지부터 주민 경보까지의 소요시간을 관리지표로 설정하는 산불 초동감지·경보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 첨단기술 도입보다 기존 관측자산의 AI 판독과 정보의 신속한 공개·공유가 골든타임 확보의 핵심이며, 민간 정보기관과의 협력이 공공 경보체계를 보완했다는 점은 국가 및 충청남도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충남의 민간투자 사업 추진방향

출처: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26.02.11.

1. 추진배경

- 지속적인 복지·민생관련 지출확대로 제한적인 재정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한 '재정-민간투자'의 병행 필요성 증대
- 전통적 SOC(교통인프라 등)중심에서 AI-에너지 등 미래 첨단인프라로의 수요전환과 20~30년이상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의 급증이 전망
- 지속적인 공사비·금리 상승, MRG폐지 이후 리스크 확대 등으로 민자실적 정체 및 소수 기관투자자 중심의 이익 편중 해소가 필요

2. 정책적 목표

-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연평균 20조 원)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 추진, 과거 5년간(70조 원, 연평균 14조 원) 대비 30조 원이상 확대
- 적격성조사 기간단축(최대 1개월 단축), 민투심 수시개최(최대 4개월 단축)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24개월 단축
- AI데이터센터, 송배전망 등 국가첨단산업 핵심인프라의 적기공급을 통해 국가경제성장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의 민자접근성 개선 및 지방정부 권한이양,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저위험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등을 통해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돌봄·노인의료복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의 확충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

3. 중점 4대 추진분야와 추진과제

- 신사업·신유형 확대
 -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환경통합시설, 철도복합시설, 청사시설 등 신규사업 민간자본 도입방안 추진
 - '단순운영형 민자' 신설 등 '운영형 민자' 확대 및 '대상지 공모형' 활성화
- 국민참여 확대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일반 국민대상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고, 펀드자산 선순위채 구성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국민과 수익 공유
 - 생활SOC 민자적격성조사 정책적 비중 및 검토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생활 밀접시설 대상 BTL전용 특별인프라 신설(2026년 한도 4조 원)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안전 강화
 - 인구감소지역 최초제안자비수도권 및 지역업체 우대가점 확대, 적격성조사 지역균형 배점 상향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도입
 - 총사업비 2천억 원(BTL 1천억 원)이하 국고지원 300억 원 이하 사업 국고지원 변동사항 지방으로 이양
 - '민자 카라반' 월 1회 현장 운영해 사업 발굴·사업화·절차 지원
 - 안전시설에 번들링 민자사업 모델 마련, 건설안전배점 강화, 법령 위반 감점 및 중대재해 사업자 참여 제한 추진
- 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
 - 적격성조사·민투심 등 민자사업 행정절차 최대 5개월 단축하고, 협약 체결후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통해 단계 현실화
 - 공사비 조정기준을 완화(5%이상), 전력비 산정방식 개선, BTO 자기자본비율 하향(10%) 등을 통한 착공 지연 해소
 - 실시협약 정보공개, RFP·실시협약 표준안 제공 및 기본계획 일괄 정비를 통해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 민자사업관련 전 국민대상 온라인 무료교육 강화

김 태 군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센터장

✓ 도·시·군 연계체계를 통한 정부 민투사업의 선제적 대응

- AI데이터센터, 전력망, 산단에너지, 노후 환경시설 통합개량, 철도역세권 복합개발 등 충남도청 사업과 연계하여 토지 공급, 인허가, 재정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 인구감소지역 및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번들링 및 네트워크형 민투사업 설계

- 소규모 생활 SOC·안전시설을 권역단위로 패키지와 하거나 여러 지역에 네트워크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 모색

✓ 충남 지역기업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민자사업 활성화

- RFP단계부터 지역업체·인력·조달 및 중소기업 기술실증을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주민참여형 인프라와 연계

✓ 민투사업 전담 지원체계 구성 및 사전협의 강화

- 도청 내 전담지원 조직 구성, 민자 카라반 및 KDI·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의 컨설팅을 활용하여 후보 사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극3특 지역 자율 R&D 출범, 권역별 과학기술 성장모델 추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지역이 주도하고 과기원·출연원이 함께 설계하는 '지역 자율 R&D' 본격 시작. 2026.09.10.

사도 단위 중앙 주도에서 권역 단위 지역 자율로

- 기존 사도 단위,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연구개발 체계를 4극3특 권역 단위의 지역 자율형 R&D로 전환하고, '26년 7개 권역에 789억 원 투입
- 4극(중부·호남·대경·동남)과 3특(강원·전북·제주)이 각각 3개·2개씩 총 18개 중점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30년까지 권역별 과학기술 기반 성장모델 구축

투자기획·협력 방식의 동시 전환

- 권역이 수립한 성장전략과 중점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블록펀딩형 투자로 전환
- 사도 경계를 넘어 권역의 연구역량·산업기반·실증환경·인재를 연계하고, 과기원·출연원이 사업단을 맡아 기획부터 과제관리·성과확산까지 총괄

권역별 강점을 살린 7개 성장모델

- 중부권(KAIST)은 반도체·첨단바이오·첨단모빌리티에 131억 원을 투입해 초광역 딥테크 실증 생태계를, 호남권(GIST)은 광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에 131억 원으로 AI 기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
- 대경권(DGIST)은 모빌리티·로봇·시스템반도체 131억 원으로 로봇벨트를, 동남권(UNIST)은 조선AX·전력반도체·첨단항공 131억 원으로 제조현장 중심 실증체계를 구축

통합공공 시행과 투자 지속 확대

- 9월 11일부터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통해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통합공공 시행
- 연구성과가 기업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고 인재·투자가 다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선순환 정착을 목표로, 현장 의견과 사업성과를 토대로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

< 4극3특 권역별 중점기술분야 및 발전모델 >



최 경 순 과학기술진흥본부 연구위원

- ✓ 중앙부처의 지역특화 연구개발이 권역 단위로 본격 출발한 만큼, 지역 기업의 R&D 과제 수주 지원 등 충남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 ✓ 중부권 중점기술 중 반도체 분야는 충남이 혁신기관 부족으로 참여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교육부

2027년도 교육부 예산 117.6조 원, 전년 대비 10.6% 증가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117.6조 원 편성. 2026.09.01.

1. 영유아 교육·보육 89조 7,354억 원, 지역·청년 지원 4조 4,655억 원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 6,429억 원 투자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 아이들이 안전하고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비를 개선을 위해 5,269억 원 투자
- (지역·청년 지원 강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신(7,944억 원), 신규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6,910억 원) 등에 4조 4,655억 원을 투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의 경우 기존 2조 1,403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초광역 단위 협업 사업(8,966억 원)을 분리

2. 첨단분야, 이공계 및 인공지능(AI) 미래 인재 양성 3조 2,630억 원

- (첨단분야 인재양성)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전형 첨단 인재 육성을 위해 6,646억 원을 투자
-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립대가 산업계 인력·기술 수요에 발맞춰 지역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6,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도입
- (인공지능(AI) 재도약 대학) 성인이 기존 전공과 경력에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결합하여 직무 향상 및 경력 재설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70억 원을 투자, 40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2년 내외의 인공지능 융복합(X+AI) 집중교육 제공

3. 교육부 '27년 미래대응기금 사업 편성

- [영유아]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5,269억 원(기존+신규)
- [지역·청년 지원] 2조 3,489억 원
 -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 470억 원(신규)
 -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6,910억 원(신규)
 -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4,650억 원(신규)
 - 거점국립대 혁신사업 7,944억 원(기존)
 -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3,280억 원(신규)
 -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235억 원(기존)

4. 기대효과

- [AI 미래인재 양성] 2조 558억 원
 - 대학생 인공지능(AI) 공동육육 지원 200억 원(신규)
 - 인공지능(AI) 재도약대학 2,070억 원(신규)
 -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6,000억 원(신규)
 -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Basic) 300억 원(신규)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5,519억 원(기존)
 - 이공학술연구기반구축(R&D) 6,469억 원(기존)

< '27년 예산안 최종 심의 결과 >

(단위 : 억원, %)

구 분	'26년		'27년	전년(본예산) 대비	
	본예산(A)	추경	예산안(B)	(B-A)	%
■ 총지출	1,063,607	1,111,733	1,175,962	112,355	10.6
【교육분야】	994,774	1,042,899	1,102,722	107,948	10.9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21,165	868,884	897,354	76,189	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6,687	764,381	788,718	72,031	10.1
■ 고등교육	160,392	160,795	189,661	29,269	18.2
■ 평생·직업교육	11,688	11,691	14,084	2,369	20.5
■ 교육일반	1,529	1,529	1,622	93	6.1
【사회복지분야】	68,833	68,833	73,241	4,408	6.4
■ 기초생활보장	1,711	1,711	1,890	179	10.5
■ 공적연금	67,123	67,123	71,351	4,228	6.3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3,909	164,312	143,139	△20,770	△12.7
■ 영유아특별회계	92,948	92,964	94,422	1,474	1.6
■ 미래대응기금	-	-	49,315	49,315	순증

이 세 미 충남라이프센터 부연구위원

-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의 전환과 함께 초광역 단위의 대학·지역 간 협업 사업 체계 구축
- ✓ 차년도 충남의 첨단분야 이공계 및 인공지능(AI)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RISE 재구조화 설계 필요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AI CCTV 통합관제 우수사례와 정책 방향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공지능(AI)과 CCTV로 더 안전한지는 우리동네. 2026.09.03.

'재난안전법' 개정 이후 첫 '현장 구현' 사례를 모은 2회차 CCTV 통합관제 경진대회

- 행정안전부는 9월 '2026 지방정부 CCTV 통합관제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27건 중 7건(대상 1, 최우수 2, 우수 2, 장려 2)을 시상함
- 「재난안전법」 개정('25.7. 시행)으로 통합관제센터 설치·AI 활용·재난안전상황실 정보공유(제74조의5)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이를 현장 서비스로 구현한 사례가 다수 제출됨

사회적 약자 보호부터 복합재난 대응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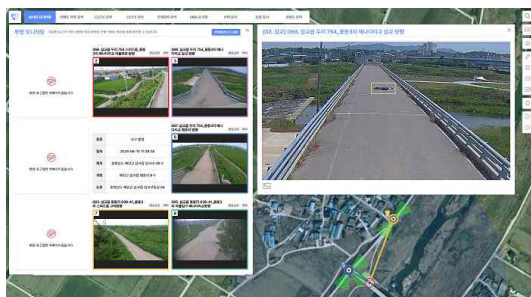
- (대상) 동두천시는 사회적 약자 사전등록과 AI 영상분석·GIS 객체추적으로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함
- (최우수) 예산군은 AI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와 하천범람 감지 등 피지컬 AI 스마트안전도시를, 울산 북구는 IoT 센서·CCTV 연계로 위험 감지 시 차단기·방송이 자동 작동하는 통합재난대응서비스를 구현함
- (우수·장려) 서초구·제천시 는 비전 AI 침수감시, 영암군은 산단 디지털트윈 통합관제, 해남군은 드론·AI CCTV 융합 현장관제를 구축함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마련된 CCTV 통합관제의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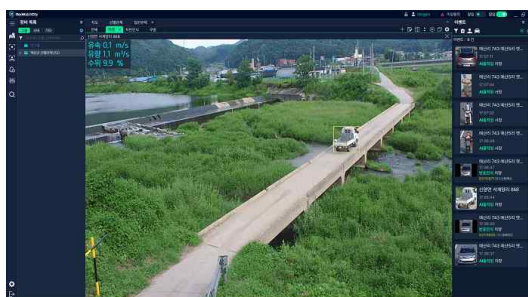
-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의 예방대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의 법적 근거 필요성 대두 및 전 지자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이었으나 근거 법령 부재로 한계 발생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25조의4)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통합관제에 AI 기술 등 활용, 공공기관 CCTV 연계와 재난안전상황실과의 협조 체계 유지 및 재난관리정보 공유 근거 신설(제74조의5).

방법 중심 관제에서 재난안전 전 분야로 확장, 우수 서비스의 전국 확산

- 법 개정 1년여 만에 CCTV 통합관제가 방법 중심에서 침수·산사태·인파사고 등 재난안전 전 분야로 확장되었음을 확인
- 행정안전부는 우수 안전서비스의 타 지역 확산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임



예산군 피지컬 AI 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예산군 AI 하천범람 감지 시스템

신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 예산군의 피지컬 AI 모델을 고령화율이 높고 관광지 교통혼잡이 잦은 도내 시군으로 확산하고, 도 재난안전 상황실-시군 통합관제센터 간 정보공유체계(제74조의5)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 침수취약 지하차도·하천에 AI 침수감시와 차단정보 내비게이션 연계를 우선 도입하고, 시군 CCTV 학습데이터를 도 차원에서 공동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부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선정과 청주공항권 공주·부여 편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선정, 대한민국 관광성장지도 새로 그린다", 2026.09.10.

충청남도 보도자료, "충남 공주·부여, 청주공항 중심 전국 5대 관광권 선정", 2026.09.11.

한국관광공사, 2025년 방한객 통계, 2026.01.30.

1.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의 개념과 선정

- (개념) 방한객이 입국하는 지방국제공항 관문도시와 주변 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연계도시를 묶어 입국·이동·체류·체험이 이어지도록 하는 관광 중심 권역을 의미함
- (배경) 2025년 방한객 1,894만 명으로 역대 최다이나 수도권 편중이 지속되어 지방 분산형 관광 생태계 조성 필요함
- (선정) 문체부는 9월 10일 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 5대 공항권을 확정하였고, 청주공항권(청주~공주·부여~익산·전주)에 충남 공주·부여가 포함됨

2. GOLD 전략과 2027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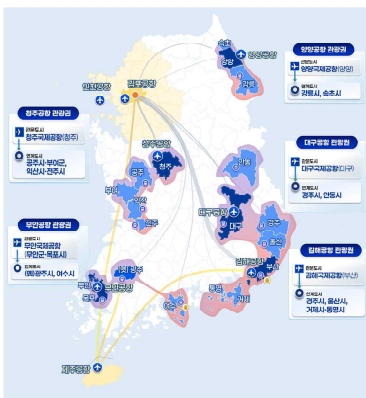
-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659억 원, 지방비 276억 원 등 총 935억 원을 편성함
- 국비는 관광권 해외 마케팅 180억 원, 지방공항·항만 직접 입국 143억 원, 교통망·통합패스 149억 원, 특화 관광콘텐츠 187억 원으로 배분됨
- 청주공항권은 공주 공산성·무령왕릉, 부여 사비백제 유적·백제문화단지·금강 수변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함

3. 추진 일정과 수요 전망

- 2029년 입국객 3,000만 명, 지방공항 입국객 500만 명을 목표로 2027~2030년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전망
- 문체부·국토부 협력 포럼(대구·김해·양양)에 이어 11월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관광·교통 정책협의회에서 과제를 관리할 계획임
-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2026년 상반기 11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하여 관광권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

4. 시사점

- 청주공항이 충북에 있고 익산·전주가 함께 묶인 구조이므로, 공주·부여가 경유지가 아닌 체류지가 되려면 공항과 백제 유적을 잇는 교통 연계와 야간·체류형 콘텐츠 확충이 관건
- 2027년 국비 659억 원에 지방비 276억 원이 대응 편성되므로 도·공주·부여의 분담과 2027년 본예산 반영, 충북·전북과의 공동 추진체계 정립이 필요함
-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에는 안전이 포함되며, 2023년 7월 호우로 침수된 공산성 등 금강 수변 유산·관광지의 방재와 다국어 재난 안내가 관광권 육성의 전제임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지도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 사업 개념도

구 창민 재난안전연구센터 초빙책임연구원

- ✓ 도는 청주공항 연계 교통과 공주·부여 체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2027년 본예산과 관광권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충북·전북과 공동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청주공항권 내 충남의 몫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관광권 선정 이후에는 외국인 관광객 안전을 관광권 평가·지원 기준에 반영하고 한국관광 통합패스 등 관광 플랫폼에 재난 정보를 연계하도록 문체부·행안부에 공동 건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제 본격 시행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농가소득 보장, 농산물가격안정제 본격 시행. 2026.09.10.

1. 농산물가격안정제란

- 지난해 8월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08.27. 시행)의 핵심 내용
-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제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0일 양재 aT센터에서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품목과 기준가격, 산정방식 등 세부 운영 방안 심의

3. 기준가격

- 기준가격은 경영비를 전액포함하고, 추가로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포함하여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이 되도록 규정
- 다만, 상시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했던 품목은 재배면적 및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조치 등을 병행하면서 순차적으로 평년 도매가격의 80% 보장
- 이와 같은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보장수준은 과거 시행했던 채소가격안정제와 비교해서 보장 수준 및 지원 대상이 대표 확대되어 실질적인 농가 경영 안정망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

2. 대상 품목

- 대상 품목은 첫째,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둘째,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정도, 셋째, 제도 운영에 꼭 필요한 객관적인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하기로 함의
- 2026년 도움 품목으로는 작황에 따른 생산량 및 가격 변동성이 커서 가격안정제 도입이 시급한 마늘, 양파를 우선 선정
- 생산액, 재배면적 및 농가 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하고, 법정 수급계획 수립 대상, 자조금단체 설치·운영, 주산지협의회 구성, 계약재배 추진 여부 등 고려

4.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a(1,000m²) 이상 재배하고, 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농업법인
- 이는 현행 농업인 자격 기준을 준용하여 가능한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
- 한편, 지급 대상농가가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할 계획
- 또한 가격안정제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필요시 자조금단체 경작신고도 인정)을 통해 실제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

농산물가격안정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든든한 경영안정망, 농산물가격안정제

1.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국무위원회)가 2026년 9월 10일 양재 aT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2. 농산물가격안정기준 설정
정부는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대상 품목 선정 (2026년)
다음 3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를 예정함.

- 1.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 2.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정도
- 3. 객관적인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2026년 도움 품목: 마늘, 양파

※ 생산·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했던 품목은 재배면적 및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조치 병행 후 순차적으로 80% 보장

4. 기준가격 산정 방식

기준가격 =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

※ 생산·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했던 품목은 재배면적 및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조치 병행 후 순차적으로 80% 보장

5. 지원 대상 및 지급 방식

지원 대상: 동일 품목 10a(1,000m²) 이상 재배하고, 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제외: 동일 품목 10a(1,000m²) 미만 재배하고, 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하지 않은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제외: 동일 품목 10a(1,000m²) 이상 재배하고, 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농업법인이지만,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6. 선제적 수급관리와 강화

재배면적 신고 의무화: 파종·정식기에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필요시 자조금단체 경작신고도 인정)을 통해 실제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

7. 향후 일정

대상 품목 선정: 2026년 9월 10일

기준가격 산정: 2026년 9월 10일

지원 대상 선정: 2026년 9월 10일

지급 시작: 2026년 10월 1일

8. 김동구 농식품부 차관의 말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든든한 경영안정망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림자료: AI 생성

박 경 철 농정혁신연구팀 연구위원

- ✓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이지만 해당 품목이 마늘과 양파 두 품목이라는 점에서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 충남도에서도 민선7기 시기 충남형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했으나 대상품목 선정의 어려움, 형평성 시비, 보장가격의 기준, 농가의 참가 요건 등의 문제로 정책적 성과는 저조했기에 정책설계에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

보건복지부

지역주도 필수의료 강화 및 AI 기반 의료공백 해소 추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지역이 설계하고 AI가 밀어준다...지역필수의료, 새판 짜다. 2026.09.10.

(개요) 지역주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공백 해소

- 보건복지부는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방향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주요 사업을 논의함
- 16개 시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주도 의료 공백 해소,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AI 기본의료 전략」의 지역 현장 적용방안 등을 논의함

(사업내용)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추진

-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신규사업 3,689억원과 기존 관련 사업 이관 8,925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2,614억 원 규모로 편성됨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3,605억 원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본 방향과 시도별 예산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을 직접 진단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 공백 해소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하도록 지원함

(사업내용)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AI 기반 의료체계 구축

- 국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2,551억 원을 투입하여 인력·인프라·공공기능 전담 협력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의 임상역량과 지역 의료협력체계를 강화함
- 의료취약지 의원에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하고, 섬·산간 지역에는 「AI 기반 재택협진」을 추진하며, 전국 72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및 2027년 사업 본격화

- 지역이 의료 수요와 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사업을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함
- 향후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2027년도 사업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윤 정 미 지역도시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별 의료수요와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설계하는 한편,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시·군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AI 패키지, AI 기반 재택협진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충남형 지역의료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자본공시 실무지원 강화와 충남의 대응과제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준비부터 작성까지 자세히 돕는다. 2026.08.30.

기업의 자연의존도와 환경영향을 재무적 위험·기회와 연결하고,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과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준비와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자본공시 안내서」와 「리프(LEAP) 실무 해설서」 공개
- 「자연자본공시 안내서」는 국내외 자연자본공시 동향과 공시지표를 비롯하여 자연 관련 시나리오 분석, 생물군계 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자연전환계획 수립 등 기업의 공시준비에 필요한 사항 종합적 제시
- 「리프(LEAP) 실무 해설서」는 기업이 자연자본 관련 위험·기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Locate(자연과의 접점 파악)→Evaluate(의존도·영향 평가)→Assess(위험·기회평가)→Prepare(대응전략 및 공시 준비)의 단계별 접근방법, 체크리스트, 사례 등을 제공
- 이는 자연자본공시를 단순한 환경정보 공개가 아니라 기업의 자연 의존도와 환경영향을 재무적 위험·기회와 연결하고, 이를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전환하는 데 의미
- 향후 기업의 ESG 대응 역시 탄소·기후 중심에서 물, 토지, 생태계,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기업의 자연자본 관리와 지역 생태계 보전을 연계하는 접근 필요

- 첫째, 충남 주력산업의 자연자본 리스크 선제적 진단 필요
 - 업종별 물·토지·자원 등 자연자본 의존도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단지별 자연 관련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기업의 LEAP 분석과 공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충남형 자연자본 데이터 기반 구축 필요
 -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수자원, 산림, 농업, 연안·갯벌, 토지이용 등 기존 환경·생태 공간정보 통합
 - 기업 사업장 및 산업단지 정보와 연계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자연자본 정보 제공 필요
- 셋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무지원 체계 마련 필요
 - 대기업에 비해 전문인력과 데이터 확보 역량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자연자본공시 교육, LEAP 진단, 위험·기회 분석, 자연전환계획 및 공시보고서 작성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
- 넷째, 탄소중립정책, 자연자본·생물다양성정책 연계 필요
 -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정책에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을 결합하여 기업의 녹색전환 투자와 지역 생태계 회복을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체계 마련 필요

자연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경영관리 수단으로 활용

- 자연자본공시 확산은 기업의 환경관리 방식뿐 아니라 공급망과 투자, 생산활동 등 경영 전반에 영향 미침
- 특히, 자연자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생태계 훼손, 수자원 부족, 원자재 공급 차질 등의 요인이 기업의 비용과 생산성, 시장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인 위험관리 요구
- 따라서 기업은 자연자본공시를 단순한 공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자연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경영관리 수단으로 활용 필요
- 정부 역시 기업이 실제 공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 방법, 데이터, 사례 및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



출처: https://www.undp.org/sites/g/files/zskgke326/files/style/s/wysiwyg_full_width/public/2024-01/thumbnail_image001.jpg?itok=MHnwoDSI (일부 수정)

사 공 정 회 환경에너지생태연구팀 부연구위원

- ✓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자연자본공시 지원자료를 지역 기업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충남형 자연자본공시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초기에는 지역 주력산업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기업별 자연자본 의존도·영향 분석과 LEAP 진단을 통해 업종별 표준모델 구축 방식이 효과적임
- ✓ 또한 충남연구원, 충남도 및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충남 자연자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이 사업장 입지와 자연환경 정보를 연계하여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향후에는 자연자본공시를 기업의 공시대응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의 녹색전환, 지역 생태계 보전을 연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충남의 산업과 자연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자연자본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동향과 2027년 확대 계획

출처: 관계부처 합동, 「자율주행 3대 강국 도약 전략(2027년 레벨4 상용화)」, 경제관계장관회의, 2025.11.2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2026.1.21.), 참여기업 3개사 선정(2026.4.28.),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협약(2026.5.13.)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 2026.8.24. / 국토교통부, 2027년 예산안(69조 원) 발표, 2026.09.01.

1. 자율주행 실증도시란?

- (개념) 도시 전체를 시범운행지구 규제특례 구역으로 지정하고, 레벨4 자율주행차 100대 이상을 실제 생활도로에 투입해 대규모 주행데이터를 축적하는 국가 실증거점임 (美 샌프란시스코, 中 우한 모델)
- (배경) 정부는 2025.11월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와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목표로 제시함
- 국내 실증 규모는 中 우한의 1/26 수준에 그쳐,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 공간이 필요함
- (협력모델) 완성차(현대차), 보험사(삼성화재), 자율주행 기업, 운송플랫폼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로 추진함

3. 성과 및 2027년 추진계획

- (제도)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허가의 운수 사업자 확대, 안전관리자(법적 책임주체) 도입 등 규제 정비를 2026년 내 완료함
- (확대) 2026.8.24.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을 의결하고 실증 지역·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함
- (예산) 2027년 예산안에 자율주행 8,801억 원(2026년 731억 원 대비 12배)을 편성함
 - 광주 포함 5~6개 실증도시에 차량 3,000대 투입, 무인형 DRT 전국 50곳(322억 원),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함. 추가 실증도시는 2027년 초 공모 예정임
- (상생·안전) 운수업계·노조·기업이 참여하는 이익공유형 상생모델과 현장 사고대응체계를 함께 구축함

2.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주요 내용

- (지정) 2026년 1월 광주광역시(139만 명, 도농복합 주행 환경)를 국내 첫 실증도시로 선정함
 - 2026년 4월 광주 전역(500.97km²)을 최초의 도시 단위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함(1차 광산·북서구 일부 → 2차 전역)
- (지원) 2026년 국비 610억 원으로 레벨4 전용차량 200대, 전용 GPU-AI학습센터, 24시간 관제, 전용보험, 규제특례를 일괄 지원함
- (참여기업) 서면·K-City 실차평가를 거쳐 현대차, 오토모머스 에이투지, 라이드플렉스 3개사를 선정함(4.28)
- (운영)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 운행하며, 안전관리자 탑승 → 원격제어 → 원격지원 3단계로 무인화함. 2027년 E2E(엔드투엔드) 기반 레벨4 실현이 목표임

4. 시사점

- 실증도시가 1곳에서 5~6곳으로, 차량이 200대에서 3,000대로 늘어나는 2027년은 지자체 유치 경쟁의 분수령임. 울산 등은 이미 전역 실증을 준비 중임
- 충남은 내포신도시 자율주행버스(자율1000번, 야간셔틀 국비 확보), 천안 KTX천안아산역~3산단 5.9km 실증(누적 8,440km) 등 실증 기반을 보유함
- 아산·천안 '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9,990억 원)가 과기부 구축형 R&D 심사대상에 선정(2026.9.4.) 되어 완성차·부품산업 집적과 연계가 가능함
- 다만, 도시 단위 시범운행지구, 차고지, 관제, 데이터 인프라, 운수업계 협의 등 공모 요건에 대한 선제 준비가 필요함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 규모 변화(2026 → 2027)

구분	2026년(광주 실증도시)	2027년 계획(예산안 기준)
실증도시	1곳(광주 전역 500.97km ²)	5~6곳(광주 포함, 2027년 초 추가 공모)
실증 전용차량	200대(3개사)	3,000대
국토부 자율주행 예산	731억 원(실증도시 사업 610억 원)	8,801억 원(약 12배 증액)
서비스 확산	시범운행지구 서비스지원 8곳(30억 원, 충남 내포 포함)	무인형 DRT 50곳(322억 원),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

자료: 국토교통부 2027년 예산안(2026.9.1.), 광주 실증도시 지정·기업 선정 보도자료, 언론보도 종합

김 원 철 공간인프라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 2027년 초 실증도시 추가 공모에 대비해 천안·아산(실증 콤플렉스, 완성차 집적)과 내포신도시(야간 실증)를 축으로 '충남형 자율주행 실증도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 단위 시범운행지구 지정, 차고지·관제센터 부지, 국비 매칭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버스·택시 업계와의 상생협의체 구성, 차선, 조명, 포트홀 등 도로환경 정비, 농어촌 지역의 무인형 DRT(50곳) 공모 참여로 실증 수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부 실증도시와 과기부 실증 콤플렉스를 연계한 SDV 데이터·검증 거점으로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

2차원 지도에서 3차원·AI 공간분석 시대로, 공간정보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 국토부,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 2차원 1/5,000 지도 중심에서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GeoAI 기반 전환
- 도시·물류·모빌리티·재난안전 등 국토 전반의 AI 공간분석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차원 지도에서 3차원·AI 공간분석 시대로, 공간정보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2026.08.03.

국토교통부,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디지털트윈·자율주행·로봇배송·스마트물류·AI 시티 등 신산업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서 중요한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 AI가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융·복합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 강소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및 인재 양성을 추진해 공간정보 산업을 확장,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

①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를 다각도로 구축

- AI 고속도로 구축의 기반이 될 3차원 고정밀 핵심 6종* 공간정보를 구축
- * 3차원 공간정보, 1/1,000 고정밀지도, 정밀도로지도, 실내공간정보, 모빌리티 보행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 구축 및 AI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공간을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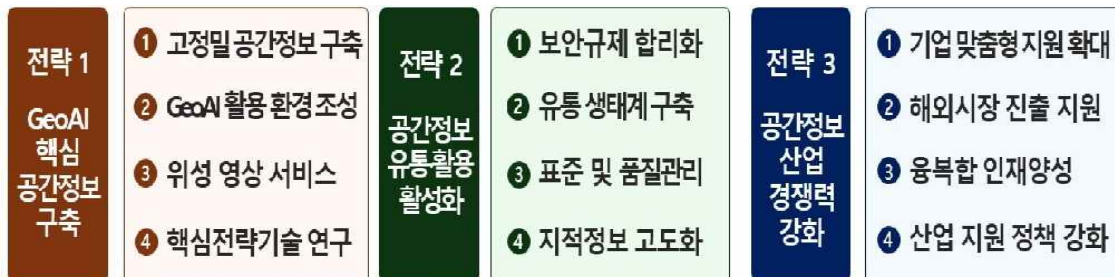
② 고정밀 공간정보가 활발하게 유통·활용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공간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 → '공간정보 안심구역' 확대 설치
- 다양한 디지털트윈·국토 모델 확산, '토지개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및 '공장 인허가 서비스' 등 GeoAI 활용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 확대 예정
- 변화되는 토지이용 추세에 맞추어 지적정보 고도화 및 민간 참여 확대할 계획

③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 신규 설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에 사업 참여기회 제공하여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
- 공간정보 특성화고 대상으로 AI 등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도 확대
- 따라서,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전문가·산업계와 소통하여 변화하는 여건이 정책에 적기 반영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

[3대 추진전략 및 12대 추진과제]



(재)충남테크노파크

✓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및 GeoAI와 연계한 충남형 UAM 실증·산업화 기반 구축 필요

- 충남은 UAM 시험평가·실증 기반과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학·연 인프라를 보유하여 UAM 산업화 추진 기반을 확보
- 향후 정부의 3차원 공간정보·GeoAI 구축 확대와 연계하여 운항경로 분석·안전관리·실증을 지원하는 충남형 UAM 공간정보 활용체계 마련 필요

해양수산부

'27년 해수부 정부 예산안 8.3조원 편성... 올해 대비 10.8% 증가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바다에서 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2027년 해수부 정부 예산안 8.3조 원 편성, 2026.08.31.

1. 2027년 해양수산부 정부예산안 10.8% 증액 편성

-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7조 4,583억 원보다 10.8%(8,053억 원) 증가한 8조 2,636억 원으로 편성
- *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 예산안의 주된 증가요인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해양수산업AX 가속화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주요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임
- 2027년 해양수산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①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②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③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함

2. (주요 정책1)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 해양수도권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
 - 해양수도권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
-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국제협력 강화(신규 184억 원) 및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하는 사업 추진
-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제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보급(신규 29억 원)하고, 완전자율운항기술(Iv4)*도 본격적으로 개발(63→157억 원)
- 동해신항과 새만금신항, 군장항(서천) 등 대규모 항만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1.67→1.68조 원)해 부족한 항만인프라 확충

3. (주요 정책2) 수산업의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 개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
-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을 올해 6월 제정 및 이행기반 마련 지원
- 수출·가공분야에서는 2028년도 수산물 수출액 40억 불 달성을 위하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수산업 스마트전환을 위한 투자도 과감히 늘리며, 스마트양식업 지속확대, 양식장 기계화전환 우선지원, 스마트가공(수산물품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지원 대폭 증대
- 섬주민 교통권 보장 강화 및 어촌 주거·복지 등 인프라 개선

4. (주요 정책3)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등을 근절해 우리바다를 깨끗하게 관리 확대
- * 취약해변 수거구역 확대 및 해양쓰레기 수거로봇 10개소 확대 도입
- 바다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미래동력 해양신산업 투자도 확대(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적기에 구축)
- 공유수면 이용허가 정보 표준화 및 공간 정보화를 통한 불법 점용·사용 상시관리체계 구축
- 해양관광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거래 시범사업 및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벨트 구축 등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 참여

5. 2027년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 예산안

(단위 : 억 원)

구 분	'26년 본예산 (A)	'27년 정부안 (B)	증감 (B-A)	%
■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74,583	82,636	8,053	10.8
○ 해양수산부 세출예산	73,566	80,140	6,574	8.9
1 수산·어촌	34,794	38,795	4,001	11.5
2 해운·항만	21,428	22,005	577	2.7
3 물류등기타(해양산업)	10,572	11,629	1,057	10.0
4 해양환경	4,305	4,977	672	15.6
5 과학기술	2,468	2,733	265	10.7
※ R&D	8,517	9,183	666	7.8
※ 정보화	538	634	96	17.8
○ 각종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	1,017	2,496	1,479	145.4

윤 중 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

- ✓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 분야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중점
- ✓ 해양수산업AX 가속화, 해양신산업 개발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 예산을 집중 반영하였으며, 이는 충남의 해양수산 미래비전인 '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의 주요 전략과 정책적 연계가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출처: 뉴스1, '육아건강실업까지 행킨다..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2026.08.04.

올해 하반기 목표로 소상공인 기본사회 체계 마련

- 보편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소상공인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침
- 육아와 건강, 실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확산을 통해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한다는 구상 발표

1인 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사업

- 육아지원금 지급 :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단절과 폐업 예방
- 건강돌봄비 신설 검토 : 건강검진을 위해 휴업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보전
 -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0% 수준
 - 근로자의 90%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상황 고려

생계 안전망 강화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지원 추진 등
- 정책금융은 중·저신용자,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
 - 채무조정 여부 등 반영하여 정책자금 가산금리 낮추는 방안 추진
 -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 방식 새롭게 도입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기금 확대

- 지역상권에 AI자율경영 식당 모델 확대
- 상생협력기금 지원대상을 지역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계획



이 민 정 경제·산업연구팀 연구위원

- ✓ 지방정부의 선제적 매칭 지원과 인프라 준비 필수
- ✓ 1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육아지원금 및 대체인력 pool 확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등 준비작업
- ✓ 고용·산재보험료 지방비 추가매칭을 대비하여 예산확보 및 관련조례 정비
- ✓ 건강돌봄비 신설에 대응한 지급체계 마련 및 지역의료기관, 소상공인단체 등과 예약편의 협약, 홍보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K-뮤직 향한 글로벌 러브콜, 비즈니스로 잇는다" 콘진원, '뮤콘(MU:CON) 2026' 개최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보도자료. 2026.08.26.



K-뮤직 해외 진출과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대중음악 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음악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뮤콘(MU:CON) 2026'을 개최함
- 뮤콘은 국내 뮤지션과 음악·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내외 관계자 간 비즈니스 교류를 지원하는 글로벌 음악 마켓임
- 2012년 시작해 올해 15화째를 맞았으며, 음악 지식재산(IP)과 타 산업 간 협업 확대를 추진함

쇼케이스·콘퍼런스·비즈니스 매칭 운영

-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유망 뮤지션 42팀의 글로벌 쇼케이스 운영
- 김재중 대표 기조강연, 인도 음악시장 진출 전략, 인공지능 생성 음악 등을 다루는 콘퍼런스와 워크숍을 진행함
- 기존 비즈니스매칭에 광고·게임·브랜드 관계자가 참여하는 '융합매칭'과 참가 기업·뮤지션의 '피칭세션'을 마련함

음악 IP 융합과 해외시장 진출 기반 강화

- 국내 뮤지션과 음악기업이 글로벌 음악산업 관계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됨
- 음악 IP와 광고·게임·브랜드 등 타 산업의 협업을 확대해 음악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할 계획임
- 콘진원은 뮤콘을 K-뮤직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유망 뮤지션과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재)충남콘텐츠진흥원

- ✓ 충남 음악창작소와 지역 뮤지션의 뮤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음악 IP를 관광·게임·브랜드 산업과 연계한 융합 비즈니스 및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서울시, '광역 아동보호 컨트롤타워'로 전환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아동복지센터, '광역 아동보호 컨트롤타워'로 새 출발...입양~심리치료 통합지원. 2026.08.24.

위기아동 마음건강 경고등...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광역 컨트롤타워로 전환

- 서울시 양육시설 아동의 48%(1,497명 중 719명)가 경계선 지능·ADHD·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마음 건강 지원 체계 구축 시급
-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정보 부족·절차 지연 등 현장 어려움 제거에 따른 입양 전 과정에 걸친 통합 지원 필요성 확대
- 이에 서울시, 1963년 설립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2027년부터 '광역 아동보호 컨트롤 타워'로 전환

거점심리치료센터 확대 및 양육자 지원체계 신설

-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학대 조사·판정 단계부터 심리서비스 지원 및 아동힐링센터 퇴소아동 후속지원체계 구축
- 지역아동 대상 2박 3일 숙박형 '마음치유 힐링캠프' 신설로 정서회복·도래관계 형성 지원
- '서울형 양육자 마음건강 상담실' 운영으로 부모·위탁부모 자가검진·돌봄코칭·상담 연계

입양 통합지원 개편 및 아동학대 현장대응력 강화

- '입양·가정위탁 통합서비스' 도입(상담·교육→절차지원→정책지원→자조모임 등) 전 과정 광역지원
-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쉼터 대상 아동학대 솔루션 회의, 슈퍼비전 등 자문체계 강화로 자치구 간 서비스 편차 해소

일시보호 기능 '아동푸른센터' 일원화 및 2027년 통합 운영

- 2027년 광역 아동보호 컨트롤타워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아동푸른센터 영유아 전용공간 리모델링·인력 채용 완료 후 전 연령 통합 일시보호체계 가동
- 형제자매가 연령기준 때문에 분리보호되던 문제 해소, 예방·치료·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유 예 나 지역도시연구팀 연구원

- ✓ 충남은 시군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일시보호시설이 분산되어 운영되어 있어 인력·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우려
- ✓ 시·군간 학대대응 자문체계·심리치료 자원을 연계하는 통합지원모델 도입 검토
- ✓ 도 차원의 광역 아동보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첫 국책사업 '양자 클러스터' 선정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2026.09.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양자 클러스터 지정 공모사업'에 '전남광주 양자클러스터'가 최종 선정

- 이번 공모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핵심 국책 사업으로, 광주와 전남이 힘을 모은 초광역 동맹의 결실이자,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거둔 첫 국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점에서 의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기술거점으로, 나주·해남·고흥을 수요거점으로 연계한 '전남광주 양자클러스터'를 통해 완성형 양자통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

전남광주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넘어서는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

- 전남광주 양자클러스터 사업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1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400억원 투입. 광주의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기술거점(HUB)으로 삼고, 전남의 주요 도시를 수요거점(SPOKE)으로 연계해 완성형 양자통신 생태계를 구축
- 광주는 양자통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평가·실증의 중심 거점 역할을 맡고, 나주는 전력망·에너지 보안 분야, 해남은 인공지능(AI)·고성능컴퓨팅(HPC)·데이터 분야, 고흥은 우주위성통신 분야와 연계해 양자기술의 산업적 활용 기반을 넓혀갈 계획

양자전환 및 적용기업 60개사 육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부터 제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자생적 산업생태계 정착 예정

- 지난 25년간 구축해 온 국내 유일의 광융합산업 기반시설이 한몫. 양자기술의 핵심인 빛(광자)을 제어하는 기술이 광주 지역의 광통신·광소재 기반 시설과 직결되기 때문. 여기에 전남지역의 에너지·우주·항공 기반시설을 연계해 차세대 보안 시스템 실증 능력을 입증한 점이 주요
-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등 연구지원기관 및 대학은 물론 SK브로드밴드, 한전KDN, 아이디퀀티크(IDQ), 우리로, 한국첨단소재, 오이솔루션 등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

양자 클러스터 선정을 계기로 산·학·연 연구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남광주를 신산업의 패권을 거머쥐는 '세계 최초의 양자혁신 도시' 구축

- 광·반도체·인공지능(AI) 등 인접 분야 재직자를 위한 교육·실습·취업 연계 양자전문 과정을 운영해 기존 산업인력의 양자전환(QX)도 적극 지원할 계획
- 전남광주는 인공지능과 에너지, 광융합 기반시설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지역으로 양자기술을 완성할 최적의 환경을 갖춘

□ 전남광주 양자클러스터 HUB & SPOKE 추진전략



신 해 지 자치전략연구팀 연구원

- ✓ 충남은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 행정수도인 세종, 그리고 충청과 연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관점에서 미래 첨단산업 국책사업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
- ✓ 충남은 천안·아산(반도체·디스플레이 허브)을 기술 거점으로 삼고, 당진·보령(친환경 에너지), 서산(첨단 화학), 논산·계룡(국방 국가산단) 등을 수요 및 실증 거점으로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 설계 요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글로벌 관광특구' 공동 1호 선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6.5.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7.31.),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6.7.31.)

체류형 관광거점 육성 국가공모사업, 60억 원 지원

- 글로벌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체류형 관광거점을 육성해 관광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공모 사업
- 선정 지역에는 국비 30억 원과 지방비 30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 편의·서비스 기반을 확충

'글로벌 관광특구' 조성, AI기반 관광인프라 구축

- 해운대·송정해수욕장, 구남로, 영화의 전당, 누리마루 APEC하우스, 벅스코, 해운대 달맞이 고개 등 6.2km²에 '낮과 밤,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특구'를 주제로 글로벌 지식재산권 콘텐츠 유치와 프로그램 운영
- 인공지능 기반 24시간 무인 관광안내소와 외국인 스마트 결제시스템을 도입, 관광편의를 높이고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관광객 밀집도 분석으로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 계획

부산 해운대구, 경주시와 공동 1호 선정

- 부산 해운대구와 경북 경주시가 정부가 처음 추진한 2026년 글로벌 관광특구에 선정되었으며, 체류형 관광거점 육성을 위해 2년간 각 60억원을 지원
- 해운대구는 1994년 전국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글로벌 관광특구도 처음으로 선정됨

관광객 서울 편중 해소 및 지역관광 대표 성공모델 육성 기대

- '글로벌 관광특구'는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선정
-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의 대표 성공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글로벌 관광특구' 위치도

백 승 희 환경에너지생태연구팀 연구원

- ✓ 충청남도 공주, 부여의 백제 역사지구 등의 역사자산과 서천 갯벌 및 서산 가로림만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 천연기념물인 신두리 해안사구 등 훌륭한 환경적 자산을 동시에 갖춘 광역 지자체임
- ✓ 공주-부여 역사축 또는 서천-태안-서산 등 해양생태축을 연계해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에 대비한 권역별 관광콘텐츠 및 연계 관광코스 개발 필요

대구광역시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출처: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지방의료 새 이정표 제시. 2026.08.12.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 선제적 추진

-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생명안전도시 대구'를 구현하기 위해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추진
- 본격 추진에 앞서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 각계 대표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 의료 현안 소통 간담회'를 개최

대책 1: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응급 통합 AI플랫폼' 확산

- 경북대병원에서는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자의 상태와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연구·개발 중임
- 대구는 오는 9월부터 이를 지역 19개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에 확대 적용해 병원 선정 시간을 단축하고, 이송 효율을 높일 계획임
- 기존 직권이송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만·소아·외상 등 특수 응급상황이나 지역 내 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광역 단위를 넘어 '초광역 이송체계'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정비

대책 2: 응급환자의 안정적인 최종 치료 제공을 위한 인·차·물·적 인프라 확충

- 10월부터 6개 병원의 6개 필수과 의사 총 2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 사제'를 본격 추진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한 진료 기반 마련
- 모자의료센터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을 자체 증설하여 3개 의료기관에서 총 17개 병상 추가
- 내년에는 최종중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위한 '중증 모자의료센터' 신규 지정을 추진. 특히, 중증외상환자 우선 수용·전원체계 마련, 중증소아환자 진료 체계 강화

대책 3: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위해 지역 의료계와의 상생 협력 체계 강화

- '시·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 산하 필수의료위원회 6개 소분과(응급, 심장, 뇌혈관, 소아, 분만, 외상)를 활용해 진료과별 수용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 정부의 5극3특 기반 초광역 협력 정책 방향에 맞춰 대구·경북 응급의료협약체를 구성. 특히,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자원 공동 활용, 광역 순환당직제 도입 검토 등으로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

대책 4: 중증응급환자 적극 수용을 위한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 지원

- 직권이송 환자 수용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진의 형사 대응 비용을 지원해 정부와 의료기관 책임보험의 보장 공백 보완
- 의료진의 법적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시민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

지역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계속 반영

- 추경호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단 1초의 지체도 없어야 하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역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환자 발생부터 이송, 치료, 회복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으로 지방의료의 새 이정표를 제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힘



차 정 우 환경에너지생태연구팀 연구원

- ✓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증가
- ✓ 충남은 의료 인프라가 천안권에 편중되어 있고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응급 통합 AI 플랫폼 및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도입하고 초광역 이송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대전광역시

온통대전 2.0, 지역화폐 넘어 'AI 시민생활경제플랫폼'으로 전환

출처: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시민 소비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온통대전 2.0 시작. 2026.8.28.

소비지원형 지역화폐에서 시민생활경제플랫폼으로 확대

- 대전시는 고물가 장기화와 지역 소비 위축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9월 1일부터 '온통대전 2.0'을 본격 운영
- 기존 캐시백 중심의 지역화폐 기능을 넘어 정책지원금, 교통·문화·복지 등 시민생활서비스와 지역상권 데이터를 하나의 앱으로 연결하고, 향후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민생활경제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정책지원금·교통·문화·복지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 2026년에는 버팀이음 프로젝트 등 21개 사업, 총 23억 원 규모의 정책지원금을 온통대전과 연계하고, 2027년에는 결혼장려금·농민수당 등을 포함한 50개 사업, 약 3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
- 걷기, 대중교통 이용, 공공시설 방문 등 시민의 생활활동에 마일리지 제공하고 카드사 포인트 전환, 충전금 선물, 기부 기능 등을 도입하여 지역화폐를 행정·경제·생활 서비스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

최대 15% 캐시백으로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지원

- 월 총제한도 30만 원, 기본 캐시백 10%를 적용하고, 추석 소비 활성화를 위해 9월에는 15% 캐시백을 제공함. 10~11월에는 취약계층과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청년창업 가맹점 이용 시 13%, 착한가격업소는 12월까지 15%의 혜택을 제공
- 단순 소비지원에서 벗어나 전통시장·골목상권·청년창업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지역화폐를 지역경제 정책수단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특징임

결제데이터 활용한 상권분석·소상공인 경영지원 강화

- 온통대전 결제데이터를 활용해 업종별 소비행태, 창·폐업 현황, 경기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를 구축하여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
- 또한 온통대전몰, 상생배달앱, QR결제 등을 연계해 오프라인 지역화폐 중심의 이용구조를 온라인 소비까지 확대하고, 시민의 소비 데이터를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

지역소비·소상공인 매출·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축

- 온통대전 2.0은 시민의 소비 혜택 확대와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여 지역경제의 역외유출을 줄이는 효과 기대
- 향후 AI와 결제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정책·소비정보 제공이 본격화될 경우 지역화폐는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시민과 행정,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지역경제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이 중 윤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 ✓ 충남도 지역사랑상품권도 단순 할인·캐시백 중심의 소비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군 정책지원금, 대중교통, 관광·문화, 전통시장, 농어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는 '충남형 생활경제플랫폼'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15개 시·군의 지역화폐 결제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상권별 소비유출입, 업종별 경기동향, 관광객 소비,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역 등을 파악하고 이를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정책에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지역경제 정책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지하수 바이러스 검사 6배 단축, 포집 필터 특허등록

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바이러스 포집용 필터 특허등록. 검사 시간 6배 단축. 2026.09.07.

신속하고 경제적인 지하수 바이러스 검사기술 개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 내 바이러스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바이러스 포집용 사워기형 필터 장치 및 검출 방법'을 개발하고, 2026년 8월 21일 특허등록(제10-3010189호)을 완료
- 기존 지하수 바이러스 검사는 고가의 채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바이러스 탈라-농축 등 분석 과정이 복잡해 약 26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간편하게 채수하고 검사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

검사시간 26시간→4시간 30분, 검출률 2.67배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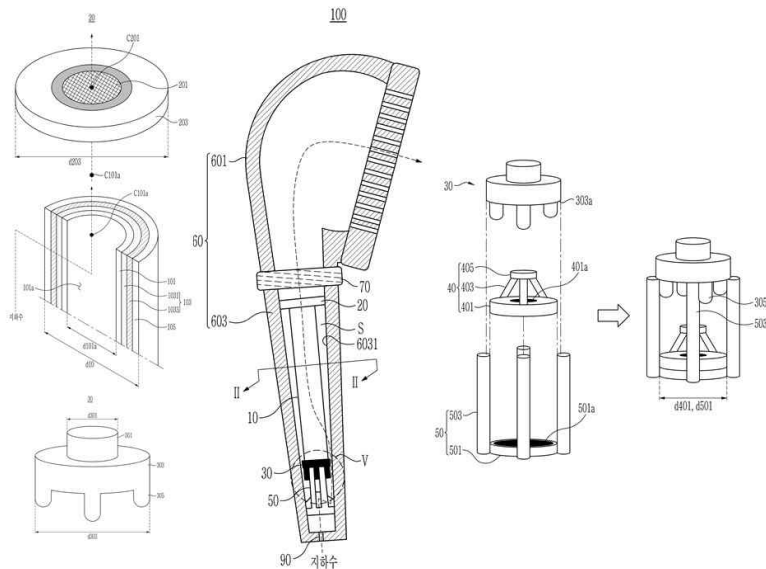
- 새로운 장치를 활용하면 기존 약 26시간이 소요되던 검사 시간을 약 4시간 30분으로 단축하여 검사 효율을 약 6배 높일 수 있음
- 1,500L 지하수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G1을 측정한 성능평가에서는 기존 표준 시험법에 사용되는 식품공전 채수 장비보다 2.67배 높은 검출률을 기록하여 바이러스 회수율과 검출 정확성 향상 가능성을 확인

사워기형 구조와 4층 중공형 필터로 현장 채수 간소화

- 일반 사워기 구조를 응용한 장치에 4층 구조의 중공형 필터를 적용하여 지하수가 필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포집할 수 있도록 개발
- 장비 운용이 간편하여 현장에서 쉽게 채수할 수 있으며, 장치 제작비도 기존 장비의 약 1/12 수준으로 낮춰 전문 장비와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현장 활용성을 높임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검사대응 기반 마련

- 검사시간 단축과 장비 비용 절감을 통해 지하수 바이러스 검사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향후 지하수 오염 발생 시 보다 빠르게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장 하 라 환경에너지생태연구팀 연구원

- ✓ 기존 검사방식의 시간·장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
- ✓ 관련 기관의 연구개발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역량 확보 필요

충청북도

취·창업에서 지역정착까지 있는 청년 정주지원체계 구축

출처: 한국대학신문 보도자료, 충북형 앵커, '청년 정주생태계 구축'본격화...대학기관 29곳 협력, 2026.07.23.



지역 청년의 취·창업과 정주를 연결하는 광역 협력체계 구축

- 충청북도는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기업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대학·혁신기관·기업연합이 참여하는 「충북형 취·창업 및 정주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함
- 협의체는 기관별로 분산된 취업·창업·일경험·정주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과 청년이 필요한 지원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하고, 취업 이후에도 충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역 단위 거버넌스 플랫폼임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청년지원 협력 플랫폼 운영

- 2026년 7월 23일 열린 제2회 회의에는 도내 14개 대학과 충청북도·청주시·제천시 등 8개 지방정부, 혁신기관 및 기업 연합 등 총 29개 기관 40명이 참여
- 참여기관들은 하반기 청년·대학생 대상 취업박람회, 취·창업 지원사업,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지역정주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동홍보와 참여자 연계, 사업 간 중복 조정 등 협력방안을 논의

도내 기관별 2026 하반기 대학생 등 청년 취·창업 및 정주지원 관련 행사						
연번	기관명	세부명	기간	주요내용	문의	
1	청주대	2026학년도 청주대학교 직무 채용 박람회	9.8.(토)	청주대 중앙도서관	•1기 직무채용 상담으로 역량 강화 및 채용 연계 •특설관 채용 정보 제공 등 부대행사 운영 •주요 채용 우수기업 참가 가능	043-299-8906
2		CJU청년창업 Festa	12월 중	청주대 미래창조관	•대학생의 창업활동 성과 및 결과물 전시 •대학생 창업인재 우수기업 간 교류	043-229-8966
3	세원대	세원 입·출·퇴근자 취업박람회	9.9.(수)	세원대 미래창조관	•취·창업·재능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043-299-6268
4	세원대	SPARK 창업박람회	9월 중	세원대 미래창조관	•1기(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청년·대학생·취업·창업·일·지역정주 프로그램 운영	043-299-8966
5	세원대	SPARK 창업페스타	12월 중	세원대 미래창조관	•MVP를 전시하는 아이디어를 통한 성과공유회 운영 •세원대 우수기업·창업·취·창업·일·지역정주 연계 행사	043-299-8966
6	청주공과대학교 (청주시 청원구)	2026년 청주시 청년인재 지원사업	9.19.(토)	청주도시 미래창조관 및 청주시 청년지원센터	•홍보관, 체험관, 박람회 등 부스 운영 •지역정주 프로그램 및 공연, 체험, 전시	043-255-5999
7	충북기업진흥원	충청북도충청남도 내일미래를 위한 청년 취업박람회	10.16.(토)	청주 오소로	•홍보관, 체험관, 전시관 등 부스 운영 •1기 청년·대학생·취·창업·일·지역정주 프로그램 운영	043-230-9777
8	충청남도	2026년 충청남도 일자리박람회 취업박람회	10.22.(목)	공평 생활체육관	•청년·대학생·취·창업·일·지역정주 프로그램 운영 •청년·대학생·취·창업·일·지역정주 프로그램 운영	043-835-4055
9	충청북도	2026 충청북도 청년 취업 페스타	10.28.(수)	문화체육관광	•청년·대학생·취·창업·일·지역정주 프로그램 운영 •청년·대학생·취·창업·일·지역정주 프로그램 운영	043-710-5960
10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년 취업 페스타	11.5.(토)	충청북도청사	•청년·대학생·취·창업·일·지역정주 프로그램 운영 •청년·대학생·취·창업·일·지역정주 프로그램 운영	043-860-7390
11	한국대 GLOCAL	충청북도 지역청년 취업박람회	11.11.(수)	한국대 GLOCAL	•청년·대학생·취·창업·일·지역정주 프로그램 운영 •청년·대학생·취·창업·일·지역정주 프로그램 운영	043-860-3915
12	충청북도	2026 충청북도 청년 취업 페스타	11.24.(토)	청주 오소로	•청년·대학생·취·창업·일·지역정주 프로그램 운영 •청년·대학생·취·창업·일·지역정주 프로그램 운영	043-229-6166
13	충청북도청과대	CHSU 청년 취업박람회 날	11월 중	충청북도청과대	•청년·대학생·취·창업·일·지역정주 프로그램 운영 •청년·대학생·취·창업·일·지역정주 프로그램 운영	043-210-8168

* 앞의 일련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합정보 제공과 공동 취·창업 페스타 추진

- 충북앵커센터는 협의체에서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기관의 '26년 하반기 취·창업·일·지역정주 지원 행사를 통합하여 제공 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간 참여자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기업·대학·학생이 만나는 '2026 충청북도 앵커 취·창업 페스타'를 추진하여 기업 채용정보 제공, 취업상담·현장면접, 유관기관 정책홍보 등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개별 취업행사를 광역 단위의 인재·기업 매칭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취·창업 성과가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박 희 원 충남RISE센터 선임연구원

- ✓ 충남도 대학·시군·혁신기관별 취·창업·정주지원 사업과 기업·학생 수요를 광역 협의체를 통해 통합 관리하고, 충남형 계약학과 참여기업과 학생을 일·지역정착·기업탐방·일경험 등과 연계하여 학생 모집부터 교육·취업·장기근속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상남도

경남도, 지역주도 인재양성 '전국 우수모델' ...초광역 사업 선정

출처: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상도, 지역주도 인재양성 '전국 우수모델' 입출... 초광역 사업 선정, 앵커 A등급 '쾌거'. 2026.09.08



경남의 인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남앵커사업 생태계!

경남-인천-강원 연계 초광역 인재양성 모델 구축

- 경남대학교가 주관하는 '경남-인천-강원, 제조AX+AI로봇 인재 양성 모델'이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됨
- 교육부는 지방정부·대학·기업이 공동 기획한 19개 모델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연계성, 인재양성 체계, 초광역 협력 구조 등을 평가하여 최종 6개 모델을 선정함
- 경남 모델은 제조 분야의 도메인 지식에 인공지능(AI)·피지컬 AI·로봇기술을 융합한 실무형 전문인재 1,500명 양성을 목표로 하며, 약 4년간 매년 최대 1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교육연구 및 취·창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기업-대학 중장기 협력 기반의 산학협력 선순환 체계 구축

- 메가존(주) 등 참여기업과 대학 간 관계를 단순한 사업 참여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며, 지역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모델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음
- 특히 경남대학교 내 메가존(주) 피지컬AX연구협력센터 조성을 추진하여 약 1,000억 원 규모의 연구·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피지컬AI 공동연구와 인재양성, 연구인력 채용 등을 연계함으로써 기업-대학-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앵커 산학협력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지역-대학-기업 협력체계 기반 앵커사업 A등급 획득

- 경남도는 교육부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1차 연도 연차점검에서 A등급을 획득함. 평가에서는 지역-대학 협력 기반의 사업 기획·운영체계, 지자체-전담기관-대학 간 현장 중심 소통체계, 지역 특화 인재양성과 산업 연계 노력 등이 주요하게 점점됨
- 경남도는 앵커 전담조직과 대학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에서 미래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연결하는 인재양성-취업-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임

홍은일 자치전략연구팀 연구원

- ✓ 충남은 충남-경기-대구가 참여하는 AI 기반 첨단바이오 초광역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되고, 1차 연도 연차점검에서 S등급을 획득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향후에는 외형적 사업 확대보다는 기업 참여 확대와 취업 연계 강화 등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별도의 대규모 시설을 신규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기업 참여형 공동연구·실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여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인턴십·채용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 실습 → 취업 →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충남형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사업의 성과를 단순 인재양성 규모 중심으로 관리하기보다 기업 참여율, 지역기업 취업률, 취업 후 근속률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점검·관리하여, 초광역 인재양성사업이 지역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청년의 지역정착, 나아가 충남 첨단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책이슈 리뷰

Policy Issue Review



정책이슈 리뷰는 충남연구원과 충청남도가 공동 발간하며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콘텐츠진흥원이 함께 합니다.